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머슴인가?

'가출인 찾기法' 없는 까닭 헤아려야

단 상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회연구소장

이러한 실례 하나만으로도 가출인 찾기를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합의하는 바 적지 않기에 그 중 세 가지를 요약해 본다.

첫째, 가출인 찾기는 '가출인 신고를 받는 첫 단계에서 자발·비자발 여부를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비자발적 가출인 발견 여부는 경찰의 의지와 역량과 문제해결기회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초동조치의 중요성).

둘째, 모든 가출인을 '의문의 가출인'으로 치부하거나, 사생활 차원의 '자발적 가출'과 강제된 '비자발적 가출'을 구분 없이 '이느 한쪽으로 일반화된 대응'은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 가출인 발생 책임이나 '가출인 찾기 책임'이 전적으로 경찰에 있는 양 가출인 찾기를 경찰에 떠넘기는 방식의 가출인 찾기는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가족·경찰·탐정 등 역할 분담 필요).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가출인'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성인 가출=대부분 자발적 가출(사생활)=현범상 자기결정권=현범상 거주·이전의 자유=공권력 개입 자체 필요'라는 등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듯 가출인 찾기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 역시 가출인 문제는 사적 문제이고, 가출인 찾기는 경찰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족과 경찰, 탐정 등과의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탐정(업) 관련 '민간등록자격 취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위되고 있는 현재의 탐정(업)을 경찰청이 가출인 찾기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파트너)'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부가 지향하는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기대한다.

일본이나 미국, 영국, 호주 등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가출인 찾기'를 경찰보다 탐정이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거듭 말해두고 싶다.

'가출인(家出人)'이란 일반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가출인 찾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의 실무상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고자로부터 이월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경찰청 예규 제631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여기에 있는 자발적 가출은 물론 보고(報故)에 따른 연락주형 등 다양한 유형의 실종이 모두 포함된다.

이 실태를 바탕으로 경찰의 '가출인 찾기'를 들여다 보면, 한 해에 발생하는 평균 7만여명의 가출인 가운데 '남성은 3%(2100여명)', '적재는 0.7%(500여명)' 정도의 가출인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적이나 수사 또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했거나 지속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상당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97%)의 가출인은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사적(私的) 자진 가출'이었다는 점도 보아, 이는 '소극적이다',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경찰의 가출인 찾기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없었는지 의문하는 지리이기도 하다. 전례서 관심을 끈다.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자진 가출이 대다수였을을 방증이라도 하듯 경찰이 '의문의 가출인'을 어떻게 추적하여 찾아가면 '나 돈 좀 벌어 자수성가 해보려고 집을 나왔는데 왜 귀찮게 찾아 다니냐'고 항의하거나, '나의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제발 더 이상 찾지 말라. 남들이 알면 아무 일도 못해 먹는다'며 다리는 찾아오지 말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듯 오늘날의 가출은 '사생활로서의 가출' 즉 가출 그 자체를 사생활의 일부로 여기는 자발적 가출이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을 기인하여 경찰이 가출인을 '몰지마식'으로 찾아 나서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민폐(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 명의 가출인이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사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범죄의 피해자 또는 위난에 처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회는 국회의 하루 기관이 아니고,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머슴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종 부리듯 하는 일일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주 고압적이다. 심지어 공천헌금을 뇌물로 주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기도 했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현 의원 자신의 지역구 출신인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과 실전을 벌이는 녹취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박 의장을 향해 '의장 자리는 내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하는 기승연환 내용도 포함됐다.

5일 공개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밤 김현 의원은 박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장님은 제가 지역위원장 할 때 의장님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선출해 준 그 자리였어요'라고 했다.

이에 박 의장은 '아니 누가 선출해 줬다?'라고 반문했고, 김 의원은 '저희가 했죠'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재직의원 과반 득표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는데 그게 김 의원이 공작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박 의장은 '의회 의장은 의



아침 햇살
고하승 주필

회 의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라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아니 그 의원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때 000,000가 뽑혀온 거라고요. 그때 지역위원들이 누구였는데도. 저예요. 저...'라고 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난 그전 팔랐는데'라는 박 의장의 말에 '그거 바보지 그럼요. 그거 아세요.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라고 심하게 핀잔을 주기도 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게 지방의원의 전언이다. 어디 그렇냐고.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 게 공천헌금 1억원이 건넸다가 들려왔다는 김경 시의원의 '버블공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더니 급기야 '김경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던 일도 있다.

경찰이 이른바 '황금 PC'에 담긴 공천헌금 관련 녹취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품 로비 정황이 드러난 것.

일부 녹취 파일에는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경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정치인들과 접촉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하거나 중간 역할을 하는 인물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대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견 단순히 강선우 의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 시스템 자체가 부패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 그야말로 맥뎀이 던져진 셈이다.

특히 김경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공천을 받으려면)3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에선 공천헌금 관련해서 김경의 시세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더 기가 찬 것은 서울 동작구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작 갑 지역구인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전직 구의원 2명의 탄원서를 통해 2023년 말 불거졌다.

탄원서는 구의원들과 친분 없이 당시 동작구청장 A씨가 동작을 당시 이승진 민주당 의원에 전달했다. 내용도 구체성이 있고 판단할 이의원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측(김현직 보좌관)에 전달해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아마도 이런 일은 너무 흔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라면 지방의원 공천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가 정당의 입김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정당 공천제는 없애져야 한다.

기고



시상수
한국소방안전원 부지부장

처음부터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많은 차라리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은 편이 덜 고통스럽다.

지나온 길을 복기하고 미래를 재설계하는데 이 사적인 실패의 기록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다. "그때 단호하게 뱉지 못했다"라는 거증은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기 위한 성찰이다.

이 경험은 마치 국가 안전망의 취약한 단면을 비추는 듯하며 그 구조는 오늘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도 그대로 점진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의 본래 구조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선임될 수 있는 '정지조건(停止條件)'이다. 자격 취득이라는 조건이 성취돼야 비로소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법적 상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관리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안전의 의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이 원칙을 정면대로 뒤집어 놓았다. 자격 없는 관계인이라도 일단 선임부터 하고 사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해지조건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문제는 이 기형적인 '해지조건부 선임'이 예외를 넘어 어느덧 제도의 몸통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의 법 집행은 문구와 단어의 해석을 애매한 영역으로 몰아붙여 본질을 흐린다. 형사법상 '아슬아슬'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을 행정 규제의 영역에 포효해 대인, 판단이 모호할 때는 무조건 규피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자의적 관행이 지배하고 있다. 감속교육은 사후에 적당히 완수할 과제라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라는 법적 지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존엄 근거이기도 말이다.

물론 현실에는 서툰 법 같은 원칙으로 교육 미이수자를 엄격히 조치하며 법 집행의 엄중함을 지키려는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의 고군분투는 대개 "일단 선임 신고는 됐지만요"는 안일한 관행과 무뎠게 고립되기 일췌다.

역사에도 '민약'을 더하는 순간 인과는 끝없이 미끄러진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경계한다. 그러나 재난의 역사에서 '민약'은 무책임한 상상이 아니라, 이 지나간 선택들을 비추는 가장 잔혹한 거울이다. 참사 이후에야 '민약' 그대 자격 없는 선임을 바로잡았더라면'이라며 인과를 거슬러 오르는 일은 언제나 늦은 자각에 불과하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전화 0213676-2114 구독신청 022926-0217
 편집국 대표 0213676-2114 FAX 021762-8223
 정치·행정부 021765-8115 경제·문화부 021926-0392
 사회·수도권부 021926-0314 편집부 021926-0242
 총무국 022926-0217 영업국 021926-0164 FAX 021762-8223
 광고문의 021926-0164 유통부 032675-7956


www.siminilbo.co.kr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로 70길 15-109(의도동, 국동VIP빌딩 6층) 구독료: 연간 180,000원 | 발행 15,000부 | 부 800부

동대문구 대표 휴양시설! 청풍명월의 자연이 어우러진 청풍유스호스텔에서 힐링 어떠세요?


-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
- 예약방법
 - ① 개 인 : 인터넷(www.chpunghy.co.kr.) 예약
 - ② 단 체(30명 이상) : 전화☎ 043 - 652 - 9090 예약
- 객실안내 : 4인실(거실겸방+욕실) / 6인실(거실+방2+욕실)
- 부대시설
 - ▣ 강당, 세미나실, 운동장 [이용료 별도 문의]
 - ▣ 바비큐장, 노래연습실, PC방, 농구장 등 [무료]
- 주변관광지 ※ 사진출처 : 제천시청




〈청풍호반 케이블카〉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청풍호 유립선〉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유스호스텔 누리집 바로가기(QR코드) →